

의안번호	제20호
의결연월일	2024. 2. 22.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청원일, 청원자 : 2024년 2월 13일, 배용하 등 1,007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2월 13일
다. 상정일자 : 2024년 2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취지설명요지(취지 설명자 : 서승필 의원)

가. 청원이유

- 논산시는 비인도적 대량살상 무기 생산업체인 (주)코리아디펜스 인더스트리의 위험성을 논산시민에게 축소·은폐하고 있음
- 각종 편법과 탈법으로 초고속 인허가 등의 특혜를 제공함
-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논산시민대책위원회 및 양촌지킴회를 불순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있음

나. 소개의원 의견

- KDI에 대한 정확한 업체 설명과 그 위험성을 주민에게 축소·은폐한 사유
- 양촌면장과 일부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주민에게 KDI에 대한 왜곡된 정보제공, 형식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편법·탈법으로 인허가 등의 특혜를 주면서 공장설립을 강행하게 된 사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생 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위원회 의견 채택

붙임 : 의견서 1부.

의 전 서

□ 청원명 :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KDI)
논산 입주 반대 청원의 건

□ 채택의견

○ 청원내용에 의하면 논산시가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이하 “KDI” 라 한다)의 위험성에 대해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기만하였다는 내용과 본 업체의 유치 및 설립 과정상 논산시로부터 받은 특혜 의혹과 인허가상 위법사항 의심에 대해 사실대로 밝혀줄 것을 요청한 바 논산시는 논산시민에게 위 청원에 대해 진실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논산시의회에서는 논산시장에게 다음 사항에 대해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 KDI 공장등록업종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이며, 국제협약으로 금지하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제조업체로 위험물을 취급 및 저장하는 시설임에도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를 시민에게 은폐하고 기만한 것에 대한 사실 유무
2. 금강유역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산시민에게 폭탄공장이 아니라고 왜곡한 사유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3만제곱미터 이상 동일 목적의 건설공사를 행할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사업부지를 쪼개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단순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원지형을 훼손하여 공사를 강행하게 된 사유
4.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지 해당 지역이 천연기념물인 하늘다람쥐, 참매가 발견되는 곳이며, 삶과 원앙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계절별로 조사하지 않고 동식물들의 휴지기인 3월에 2~3명의 인원이 단 3시간 동식물의 생태조사를 마쳤는데, 이러한 졸속 인허가에 대한 사유 및 근거와 논산시 입장
5. KDI는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사업부지 매입을 도운 사유, 논산시가 공사착공을 기념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한 사유와 동일 사업부지에 여러 업종의 기업체를 유치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KDI업체와 같은 무기제조업종을 유치한 사유
6. KDI, KDS업체의 상시 화약 저장량 및 폭파 위험도에 대한 현황과 논산시 입장
7. 당초 논산시와 KDI간 MOU 체결시 1개의 업체가 입주하기로 했으나, 이후 사업체명을 KDI, KDS로 분리하여 공장설립 허가를 내준 사유
8. 논산시민, 논산시, 기업체(KDI, KDS)와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 소통을 추진하기 바람.

○ 채택 의견서안 요약

1~8번 항목에 대한 논산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논산시가 해당 집행부서의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기된 의혹과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 논산시장이 논산시의회에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논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한자인 논산시장에게 본 의견서를 이송하여,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논산시의회에 보고 되도록 처리하고자 합니다.